



주간통일정세 2010-32(2010.08.02~08.0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3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8/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초 연이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방문하고 3월에는 10만여명의 함흥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군중대회에 참석하는 등 이 기업소에 큰 애착을 보이고 있음.
  - 김 위원장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2.8비날론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상건설과 과학기술개조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
  - 그는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 설비의 만기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
  - 이날 현지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이 동행
  
- **北김정일, 함경남도 기업소 현지지도(8/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
  - 김 위원장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의 내부를 돌아본 뒤 “공장을 현대화하고 기계생산을 늘이는 데 주강과 주물, 단조와 같은 기초공정이 중요하다”면서 “최신식 설비로 장비된 이 공장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상건설장을 찾아 “가장 실리있는 주체적 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총역량을 집중해 공사를 앞당김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비료 폭포가 쏟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
  - 또 “나라의 화학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스화대상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것과 함께 화학공업의 중요한 기초원료의 하나인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도 다그쳐야 한다”고 주문
  - 이날 현지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함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장 시찰(8/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의 '8월 3일 인민소비품' 방침 제시 26주년을 맞아 열리고 있는 함경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시찰
  - 김 위원장은 전시된 옷과 신발, 식료품, 가정용품 등을 둘러본 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모든 인민소비품 생산단위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에 충성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자"고 강조
  - 그는 "인민들은 생활이 유족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질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경공업공장을 만부하(풀가동)로 돌리고 모든 단위에서 생산자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발양시켜 '8월 3일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시찰에는 광범기 함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8/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야강군민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이 발전소는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조기 완공을 독려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함.
  - 계획 시설용량 18만kW의 이 발전소 공사는 금야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쌓아 인공호수를 만든 뒤 여러 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세우는 것으로, 상류의 댐은 지난달 말 완공
  - 이날 현지지도에는 광범기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비서, 홍석형·태종수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국방위 국장이 수행

#### ■ 김정일동향

- 8/ 2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8/2, 중통·중방)
  - 광범기(함경남도위 책임비서), 장성택(黨부장), 김기남(黨비서), 김경희· 홍석형·태종수(黨부장들)동행
- 8/ 3 김정일,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대상 건설장 현지지도(8/3, 중통)
  - 광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 당 부장 등이 동행
- 8/ 4 김정일, 함경남도 인민소비품전시회장 참관(8/4, 중통)



- 광범기(함남도 黨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홍석형·태종수(黨 부장) 등 동행
- 8/ 4 김정일, 서성구역 하신동 초급당 12세포 당원 등에게 「감사」 전달(8/4, 중방)
- 8/ 5 김정일, 완공단계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8/5, 중통·중방)
  -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黨 비서), 홍석형·태종수(黨 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위 국장) 등 동행
- 8/ 4 김정일, 이경희 노인(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1동)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8/4, 중통)

####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불패의 전위대오', '강철의 전투대오', '조직사상적 순결체'라며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이 있는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8/2, 중통·중방·노동신문)
- 김일성 저작(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1991.8.1) 발표일 즈음 南에서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고 남북협력과 접촉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의 기본요구"라고 강조(8/2, 중통·노동신문)
- 北의 선군정치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복침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패"라며 선군정치의 위대성 선전(8/3, 중통·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13돌 즈음 同저작 해설 및 "조국통일3대헌장 구현과 6.15·10.4선언 고수 이행" 선동(8/4, 중통)
- '소할바령회의(김일성 조직)' 70돌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진행(8/5, 중통)
  - 최희정(黨 부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혁명사적, 과학, 교육, 黨 간부 양성기관 일꾼들 등 참가

#### 나. 경제

##### ● 北, 라선시에 국제공항 구상(8/5, 요미우리신문)

- 신문은 중국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외무역 거점인 라선시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평양 외의 첫 국제공항을 라선시에 건설해 러시아와 중국, 몽골과 연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착공 전망이 어렵다고 전함.
- 북한에는 현재 국제공항이 평양에만 있으며 항공편도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을 연결하는 정도임.
- 재정난에 처한 북한이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수 밖에 없어 중국 측에 계획을 타진했지만



중국 측은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무역항인 라선시는 올해 1월 평양과 같은 형태의 중앙정부 직할 ‘특별시’로 승격
- 라선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토지사용권을 획득했고, 몽골도 지난 4월 경제무역에 관한 각서에 서명

#### ● 北 조선무역은행 美법원서 패소(8/7,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뉴욕법원이 대만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
- 리처드 J 설리번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고소인인 대만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천228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상업계약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근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로 상환능력, 신뢰도 등 대외신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돼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 기타 (대내 경제)

-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 대형산소분리기 공기흡입굴뚝 건설 선전(8/2, 중방)
- 北 조선우표사, 가요들(애국가, 진달래)을 소개한 새 우표 발행(8/3, 중통)
- 평양 만수대거리에 ‘평양비단상점’ 개업(8/4, 중통)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00세대 살림집 건설 완공(8/5, 중방)
- 北,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준공식 진행(8/5,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최용해(황해북도 당책/준공사), 허택(전력공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배달준(국가건설감독상) 참가
- ‘2.16과학기술상’ 수여식,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8/5, 중통)
  - 최태복(黨비서), 이자방(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김용진(교육위 위원장),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

#### 다. 사회·문화

#### ● 北쌀값 폭등세 지속…열흘 새 50%↑(8/2, 자유아시아방송(RFA))

- 환율 상승과 폭우 피해 등의 악재로 북한의 쌀값이 kg당 1천원을 돌파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1천500원까지 폭등
-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30일 쌀 가격은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kg당 1천300원~1천500원, 무산군에서 1천400원, 청진시에서는 1천500원 이상”이라고 전함.



- 방송은 “식량가격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인 환율이 위안 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열흘 새 50%가량 오른데다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난달 중순 북한의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함경남도와 평안남도를 잇는 양덕고개의 철도가 끊겨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지방의 식량 재고 부족이 심해졌다”고 밝힘.

### ● 北, 南가요 가사 바꿔 ‘찬양가요’로 불리(8/2, 데일리NK)

- 매체는 중국의 관광객에서 입수한 동영상이라면서 평양 모란 전시장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청희씨가 기타를 연주하며 남쪽 가수 최진희의 노래 ‘사랑의 미로’를 ‘찬양가요’로 개사해 부르는 모습을 공개
- 매체는 이 영상에 대해 “올해 초 중국 관광객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며 “김 씨는 남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김정일에 대한 흠모와 충성을 손님들 앞에서 과시한다”고 설명
- 김씨가 개사해 부른 노래의 제목은 정확치 않은 가운데 노래의 시작 부분인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 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는 “아침이 어디서 오는지 백두에 올라 가봤죠/ 하늘땅을 여는 폭포서 해돋이 보고 알았죠”로 바뀌었음.
- 또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인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 여’는 ‘우리 장군님 모습 빛나는 해돋는 백두여’로 개사됨.
- 매체는 “(남한 가요의 가사를 바꿔부르는 것은) 북한 내부 곳곳에 파고든 ‘한류’의 실체가 엿보이는 장면”이라며 “실제 평양의 많은 식당에서 ‘남한 노래’가 불리고 있다”고 소개
- 매체는 “남한 관광객, 혹은 해외 동포들을 겨냥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를 ‘검열’에 대비해 노래 가사를 ‘김정일에 대한 흠모’ 내용으로 바꾸어 부른다”고 덧붙임.

### ● 北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8/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2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
- 통신은 “공연은 힘있고 기백 넘친 체조동작과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 무용, 천변만화하는 배경대와 화려한 전광장치 등으로 황홀한 예술의 신비경을 펼쳐보였다”고 소개
- 이날 개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강능수 내각 부총리, 내각 간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
- 특히 이번 공연에는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제5장 ‘친선아리랑’을 추가하고 강화되고 있는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았음.
-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려여행사를 통해 4박 5일 일정으로 ‘아리랑’ 공연을 보러 단체관광을 가면 왕복 항공료, 호텔숙박비, 각



중 입장료 등을 모두 합쳐 1천390유로(한화 약 216만원)가 들며, 공연 관람료는 좌석에 따라 80유로 내지 300유로(한화 12만5천원~46만5천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함.

#### ● 北 집단체조 ‘아리랑’에 판다 등장 (8/3, 중국신문사)

- 북한이 지난 2일 평양에서 개막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에 중국에 대한 우호의 제스처로 판다가 등장
- 신문은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올해 아리랑 공연에는 처음으로 ‘친선아리랑’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도
- ‘친선아리랑’에선 공연자들이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로 분장하거나 중국 전통 민속의상을 입고 나와 작은 북을 치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참가자들은 ‘조·중 우의와 압록강 강물은 영원할 것이다’, ‘조·중 우의는 근원이 오래고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등의 글자를 카드섹션으로 만들기도 함.
- 북한은 올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아리랑 공연에 제5장 ‘친선아리랑’을 추가,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

#### ● 北 홍남시 수해로 120여명 사망(8/3,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달 중순 북한에 내린 집중폭우의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함경남도 홍남시에서 약 120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큼.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믿을만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2일 내린 폭우로 성천강의 제방이 넘치면서 강 하류지역인 함경남도 홍남시에 살던 주민 2천여 명이 완전 고립됐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군의 직승기(헬기)로 구조됐지만 홍남시 하덕리에 농촌지원을 나왔던 고등중학생 40명을 포함한 주민 120여명은 구조되지 못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구조에 나선 헬기는 공중 구조장비가 없어 착륙을 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착륙할 장소를 찾지 못해 구출에 실패했다”고 덧붙임.
- 방송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내린 폭우로 철길이 끊어져 8.15를 앞두고 백두산 현지답사를 떠난 당 관리 60여 명을 태운 특별열차가 량강도 운흥군에 고립된 상태”라고 밝힘.
- 방송은 “북한이 장마철이 되기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구조장비가 부족한데다 산에 나무가 없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임.
- 함경남도 신흥군인민위원회 김대혁 사무장은 3일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 군이 입은 피해는 3년 전의 수해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재난”이라면서 “살림집과 상하수도망을 보수하고 대동천 제방 등 중소하천 제방을 다시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압록강 범람 위기…신의주 대홍수 우려(8/4, 데일리NK)**
  - 지난달 중순부터 내린 폭우로 압록강 유역의 댐 수위가 크게 높아져 하류의 신의주 지역에 큰 홍수가 우려됨.
  -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압록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풍댐을 포함해 압록강 상하류의 댐들 대부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평안북도 수풍 지역에 7월 한 달 동안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436mm의 비가 내렸는데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신의주에서 큰 홍수가 날 수도 있다”고 밝힘.
  - 이어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둥시의 경우 압록강 하천의 범람을 우려해 강변에 대규모 수방벽을 설치하고 주변 상점들에 위험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면서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단둥시가 뚝을 높여 신의주 지역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덧붙임.
  - 한 신의주 주민은 이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시 인민위원회에서 하천을 정비하고 집 수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다”고 전함.
  
- **北, 中관광객에 ‘아리랑’ 관람 강요(8/4,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개막한 집단체조 ‘아리랑’을 북한관광 필수코스로 정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관람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관광 상품을 다루는 단둥(丹東)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아리랑 관람을 북한관광의 필수코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리랑을 관람하지 않고는 북한관광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함.
  - 단둥의 또 다른 여행사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북한관광 상품에 아리랑 관람을 필수코스로 정했다”며 “다른 관광코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아리랑은 반드시 관람해야 한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에만 해당하며 다른 외국인들은 아리랑을 관람하지 않아도 북한관광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北, 기독교인 3명 처형(8/4, NK지식인연대)**
  - 매체는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지하교회’에서 주민 23명을 체포해 주동자 3명을 처형했다고 전함.
  - 또한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5월 중순 평성시 구월동의 한 지하교회에서 주민 23명이 보위부에 체포돼 주동자 3명이 처형당하고 나머지 20명은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면서 “처형된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함.
  -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신의주에서도 전도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신의주 주민 여러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면서 “생활고로 인해 주민들이 쉽게 미신이나 종교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당





다”고 밝힘.

- 또 “이곳에 온 탈북자 가족들은 모두 가족 단위로 오두막 같은 집을 배정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한다”며 “일종의 ‘추방촌’인 이곳은 수용소처럼 철조망이나 24시간 감시하는 인원은 없지만 워낙 깊은 산골이라 빠져나가기 힘들고, 설령 빠져나가도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 사회의 특성상 타지에 정착하기 힘들다”고 소개
- 단체 관계자는 “과거 탈북자 가족들은 거주지와 같은 도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추방되거나 북·중 국경지역의 평안도 산골마을 같은 곳으로 보내졌지만 이번처럼 따로 수용되기는 처음”이라며 “정치범 수용소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이 추방촌은 지난 5월 호구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 검열’ 이후 조성됐다”고 설명

#### ● 北통신 “지난달 폭우로 5천500여 세대 침수”(8/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5일 지난달 중순부터 내린 폭우로 북한 전역의 주택과 공장, 기업소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통신은 ‘해당기관이 종합한 자료’를 인용, “전국적으로 5천560여세대의 살림집(주택)과 350여동의 공공건물, 생산건물이 파괴 및 침수됐고, 1만4천85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거나 유실됐다”고 밝힘.
- 또 “자강도와 함경남도에서는 각각 673세대, 486세대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함.
- 이번 비로 황해남도과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지역에서만 7천380여정보가 침수됐고, 평안남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강과 하천의 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침수되거나 파괴됐다고 통신은 소개
- 또 “15만kVA변압기 2대와 7만5천kVA변압기 1대 등 전력 설비가 파괴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철로가 쏟아져 내린 흙과 돌로 뒤덮이거나 유실되면서 열차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해 각종 설비 피해도 큰 것으로 보임.

#### ● 北김정숙 고향 회령 ‘마약범죄 도시’ 전략(8/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가 ‘마약 범죄의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자사 통신원과 조선족 여행자의 전언을 인용,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회령시에서는 마약에 취해 살인, 폭행 등을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필로폰이 흔한 이 도시에서는 공동 구입시 비교적 싼 값에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가정주부들끼리 모여 필로폰을 하기도 한다”고 밝힘.
- 북한의 기관들은 외화벌이 등을 위해 직접 마약거래에 나서는 예가 많은데, 함흥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경 도시인 회령시를 통해 중국 지린성 등에 내다파는 루트가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달 중순 회령 친척집에 다녀왔다는 조선족 최강림(가명)씨는 RFA에 “한 형제가 보위부원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마약을 복용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들었다”고 말함.
- 최씨는 또 지난달 12일 가정주부들이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다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고, 열흘 뒤에는 한 남성이 환각 상태에서 29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함.
- 방송은 회령시의 대학생 소식통을 인용, “노동단련대에서도 공공연히 마약을 하는데, 지난달 9일에는 한 노동단련대 수용자가 마약을 복용한 반장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터져 단련대 대열지도원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소개
- 방송은 “언제부턴가 함흥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이 당국의 단속으로 유통되지 못하자 순도가 떨어지는 개인 제조 마약이 나돌고 있다”면서 “마약의 성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살인, 자살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임.

#### ● 北TV ‘신의주 등 압록강유역 3천정보 침수’(8/7, 조선중앙TV)

- TV는 이날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압록강 상류지역과 중국의 동북지방에 폭우가 내려 압록강 하류의 수위가 높아진 결과 “평안북도 안 여러 지역에서 큰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신의주시에서는 이번 큰물로 시의 상단리에 위치한 7, 9호 펌프장이 침수돼 시안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음료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힘.
- 방송은 또 “평안북도에서는 이번 큰물에 대처해 위험지역의 주민을 소개하는 한편 제방을 높이고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구역에 흙마대를 쌓아놓는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함.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가下 중앙경공업제품 견본관에서 개막(8/3, 중통)
- ‘세계어머니젓먹이기주간’(세계모유수유주간, 매년 8월 첫째 주) 행사, 駐北 유엔아동기금 대표와 WHO 대표부 성원 등 참가下 咸南 함흥에서 진행(8/4,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 中외교관 20여명, 금강산 관광(8/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4일 북한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20여명이 최근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금강산을 관광했다고 밝힘.





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견해라고 덧붙임.

- 나타레가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을 중재 하겠다는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대답

####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고 압살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이라며 미국의 對北핵압살책동에 대처한 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 주장(8/5, 중동·노동신문·중방)

### 3. 대남정세

#### ● 北신문 “전자전, 핵전쟁 모두 준비돼 있다”(8/2, 우리민족끼리)

- 매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상용무기(재래식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북)는 모든것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매체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선의 경고’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이달 중순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해 연말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단순한 ‘억제력 과시’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선언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냉전의 포고” 라면서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침략자들이 끝내 평화와 통일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원수들이 도발한 부정의의 전쟁에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의 작전 반경은 한계가 없고 타격지점에는 제한이 없다”고 위협
- 또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다”며 “정의의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이라고 주장

#### ● 북한군 “서해훈련에 물리적 대응타격”(8/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3일 우리 군의 백령도 등 서해 5도 인근의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사령부는 이날 통고문을 통해 “8월에 들어서면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인근수역에서 지상, 해상, 수중 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벌이려는 괴뢰 군부호전광들의 해상사격소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 공화국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이며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



며 이같이 위협

- 또 “이번 해상사격소동은 우리의 자위권을 노린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면서 “이미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바와 같이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
- 통고문은 이어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불변의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우리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인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 선박들은 역적패당이 설정한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린다”고 덧붙임.

### ● 北, 서해 기동훈련에 재차 ‘타격’ 위협(8/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5일 시작된 한국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을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시 ‘타격’ 위협을 가해옴.
- 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패당은 5일부터 9일까지 전쟁연습 기간 북남 쌍방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서해 5개 섬 인근 수역에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지상, 해상, 수중 사격 훈련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패당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괴뢰 호전광들이 불질하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아성을 짓뭉개 놓을 것”이라고 밝힘.
- 또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서해기동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합동해상전쟁연습에 돌아치는 목표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며 “일단 사소한 공격기도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즉시 전쟁광신자들과 살인장비들을 모조리 바다 깊이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 말함.
- 통신은 “이번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과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임.

### ● 北신문, “‘물리적 대응타격’ 빈말 아니다”(8/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신문은 육·해·공 합동 해상기동훈련 사흘째인 7일 이 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타격’을 위협한 사실을 재차 거론하며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지난 3일 통고문을 통해 서해 해상훈련과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이날 ‘용납 못 할 반공화국(반북) 군사적 도발’ 제하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조선 서해에서 벌여 놓은 대잠수함 훈련은 철두철미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이어 “괴뢰들이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그 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북핵 6자회담 존속 여부 검토할 시점”(8/6)

- 북핵 6자회담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제주평화연구원의 한인택 연구위원은 6일 “북핵 6자회담을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찾을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이날 제주 중문관광단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안보체제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6자회담과 같은) 지역 다자포럼에서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킨 사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6자회담이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포기하기에 지금까지 들인 공이 아깝다면 최소한 6자회담의 구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6자회담이 언젠가는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경우 6자회담의 기본 전제와 구도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위원과 함께 첫번째 패널에 토론자로 나선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자회담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위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교수는 “6자회담은 현재의 교착상태와 비관론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중한 결과를 낳은 게 사실”이라며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을 그 예로 들었음. 두번째 패널에서 토론자로 나선 도널드 그로스 스톤브리지 국제기구 자문관은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널드 자문관은 발표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북아의 지역 안보를 추구하는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의 만남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협상이 아닌 대화를 위한 만남이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뿐만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포럼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재단(이사장 정몽구)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한국-태평양 프로그램이 공동 주최한 이날 국제회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 한국의 시각’, ‘6자회담: 중국과 미국의 시각’, ‘4자회담, 평화체제, 지역안보 체제’로 나눠 진행됐음.
- 각 패널에서는 한 연구위원과 이 교수, 도널드 자문관을 비롯해 서울대 전재성 교수, 미국의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 펠렐 버클리대 교수, 중국의 개혁개방포럼 판젠창 예비역 소장, 진찬룡 인민대 교수 등 한국, 미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음. 또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각각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한국의 시각’과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미국의 시각’을 주제로 연설했음.

### ● 印尼외상 “北, 6자회담 복귀의향 표명”(8/2)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마티 나타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음. 나타레가와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6자회담에 기꺼이 복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조만간 모든 당사자가 대화, 즉 협상 프로세스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대화에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사태가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될 위험이 있으며, 결국 원치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 나타레가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답했음.

### ● 아인혼 “회담을 위한 회담 관심 없어”(8/2)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음.
-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 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이미 (비핵화) 약속들은 존재한다. 9.19 공동성명이 그것”이라며 “북한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데 진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6자회담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통해 이들과 협상을 추구하는 반면 효과가 없을 경우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압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과 이란의 행동으로 인해 두 나라가 연계될 수 밖에 없다”며 “두 나라 모두 IAEA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두 나라 모두 유엔 헌장 7장 하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은 핵개발에 있어서 두 차례 핵실험을 해 훨씬 더 발전된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음.



### ● 아인혼 “수주, 수개월간 기존 대북제재 시행”(8/2)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관련, “앞으로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아인혼 “北-이란 달라..맞춤형제재 추진”(8/2)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 “이란과 북한은 다른 케이스이며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2층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구상은 두 나라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인혼 조정관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강화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도전과제들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북한과 이란 정부에 압력을 가해 그들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오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협력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 이용준 차관보는 이와 관련, “곧 발표될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와 북한의 국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법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대이란 제재에 언급, “오늘 협의에서 우리 측은 제재의 대상이 아닌 원유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한국과 이란 간 무역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6자회담에 서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석유자원을 갖고 있는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정권을 지탱해줄 상업적 거래가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북한 정권에 중요한 위조행위, 사치품 수입 등의 자금흐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란보다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프스씨의 석방을 위한 특사파견 여부와 관련, “지금 상황은 여기자 2명을 구해냈던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특사파견 당시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조성하고 북한의 건설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 그는 “하지만 우리가 이후 북한에 충분한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며 북·미 관계경색을 타개할 목적으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 北 조선무역은행 美법원서 패소(8/8)

-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뉴욕법원이 대만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리처드 J 설리번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고소인인 대만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천228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만의 MICB는 지난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판결로 조선무역은행이 대만 은행에 돈을 상환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현지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당시 총 500만 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뉴욕 소재 MICB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 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천달러, 2월에 원금 10만 달러, 4,5월에도 각각 원금 10만 달러 등 모두 46만2천달러 가량을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았다.
-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상업계약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근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로 상환능력, 신뢰도 등 대외신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돼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MICB측의



변호인인 설리번&워세스터 LLP측은 조선무역은행의 미국내 자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 美, 테러지원국 北지정 제외 유지(8/6)

- 미국은 5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입장을 유지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2009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음.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 북한의 지난해 2차 핵실험 실시, 올해 천안함 사건 도발 등을 이유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음.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음. 또 북한이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2008년 5월 거듭 지정됐음을 전했다.
-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서는 군사물자, 기술 등의 판매가 금지돼 있음.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을 올해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난달 재지정한 바 있음.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음. 대니얼 벤자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나 하마스에 대한 북한 무기 수출 시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보도를 봤으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만일 북한이 정말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면 명백히 우리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상당히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보고서는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일본 송환을 위한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 경과 등을 전한 뒤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북간 교섭 내용을 지난해와 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아직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보고서는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핵심 세력이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테러조직이 되고 있다면서 알-카에다 조직이 미국 및 서방 목표를 향한 공격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그룹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가장 큰 테러지원국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시리아도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정치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테러센터(NCTC) 집계 결과 지난해의 경우 83개 국가에서 1만1천건의 테러공격이 발생, 1만5천 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 건수로는 전년도에 비해 6%, 사망자 수는 5% 각각 감소한 것임.

-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234건의 대규모 테러 공격 중 3분의2 가까이가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음.

#### ● 아인혼 “北, 대화 재개 준비 안 돼 있다”(8/4)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4일 북한의 최근 행동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들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우리가 지금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북한의 행동은 그들이 핵무기 포기 의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진심이라면 설득력 있는 실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의 건강 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정신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일본이 이란에 대해 유럽연합(EU)처럼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EU가 채택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일본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다량 수입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가 일본의 에너지 안보나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미, 北해외비자금 핵심관리 3인 특별제재 지정”(8/4)

- 미국이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등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금융인 3명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의 1순위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로 해외 불법활동으로 조성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면 겨냥해 미국의 ‘정밀 타격’식 돈줄 조이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정부 고위소식통은 4일 “미국 정부와 정보당국은 이미 김동명 행장을 비롯해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오퍼레이트(operate.운영)하는 세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대상에 이들이 포함될 경우 북한 지도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 3인은 해외에서의 무기수출과 마약거래,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달러의 비자금을 가명계좌 형식으로 관리·운영하



면서 이를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15개 금융기관 가운데 9개 금융기관이 불법행위를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함께 무역회사 가운데 불법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과 조선련봉총기업도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개인 3명과 불법행위와 관련된 9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10~20여개의 기관과 개인이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중 김동명 행장은 이미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9개 금융기관 중 일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그러나 새로운 제재대상 선정과정에서 가급적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또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이 포함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될 1차 제재대상은 가급적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핵심적인 기관과 개인들만을 포함시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 미국은 앞으로 2~3주내에 대북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제재대상을 관보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 ● 美 “北 더 이상 도발행동 말아야”(8/4)

- 미국 국무부는 3일 북한이 한국의 서해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물리적 대응타격’을 가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 이상 도발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훈련은 양국간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 역내 평화를 위한 뒷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음.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긴장확산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험한 말을 주고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특히 우리는 역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크롤리 차관보는 대북한, 대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 “이는 지구촌의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나서 효율적으로 이행해야할 문제”라며 각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세계 각국과 금융산업계 등 제재관련 부문에서는 북한 혹은 이란과 자본 및 보험 등의 거래를 하는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美, 2~3주내 ‘北 블랙리스트’ 발표”(8/3)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와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2~3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3일 전했다. 이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달 하순 이전에 관보를 통해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3일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대상 목록을 2~3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아인혼 조정관은 이 발표가 난 뒤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당국자들로부터 새로운 대북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이 머지 않은 시기에 공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이달 하순 이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만간 우리측 정보 당국과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 새로운 행정명령에 등재될 개인과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최종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 블랙리스트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인 1718호 및 1874호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이 상당수 중복돼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데 동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며 “안보리 대북결의와 행정명령 13382호는 주로 대량살상무기(WMD) 활동과 관련된 인물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불법행위에도 관여하고 있어 상당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정된 대상은 8개 단체와 개인 5명임.
- 단체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KRGC),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며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임.
- 또 미국 행정명령 13382호를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WMD 관련 제재대상은 이들 8개 단체와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조선연화기계합영회사, 해성무역회사, 조선북합설비수입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회사, 조선영광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목공무역회사, 목성무역회사, 시노키, 조선광선은행, 압록강개발은행 등 22개 단체와 개인 1명(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임.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의 명칭은 영문을 번역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일부 단체의 명칭은 서로 비슷해 동일업체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北 위폐제작 직접관여 의심여지 없다”(8/3)

- 미국은 2일 북한의 위폐제작, 마약거래 및 다른 불법적 활동들이 돈을 벌기 위한 오랜 관행이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려되는 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특히 북한의 위폐제작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위폐제작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 “조만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는 또 북한이 미국을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거듭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역내 불안정의 근원은 북한”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에 의한 일련의 도발 행위 결과로 북한은 수주 내에 추가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계속 일련의 도발 행위를 한다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다”며 행동 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 <北불법활동 실체는..‘슈퍼노트’ 주목>(8/3)

-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이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으로 지목한 북한의 ‘불법활동’의 실체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아인혼 조정관은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수억 달러를 벌며 핵개발과 사치품 수입에 쓰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미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련정보와 물증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시사했음. 미 중앙정보국(CIA)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7억 달러인 수출액 가운데 불법활동에 의한 수입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우선 주목되는 불법행위는 달러 위조임.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일(워싱턴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위폐제작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음. 특히 100달러 짜리 초정밀 위폐인 ‘슈퍼노트’에 대한 북한 연루설이 외교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대표적 사례가 2008년 부산지방경찰청이 국내로 밀반입되려던 9천 94장의 슈퍼노트를 적발한 사건임.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개입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음. 아직까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북한의 위폐제작 및 유통 의혹과 관련해 ‘뜨거운 현안’으로 살아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임.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올 3월1일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보고서’에서 “북한의 슈퍼노트가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부산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적발되는 등 미국을 비롯해 여러나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음. 미 정보당국은 올해 초 미국이 새로운 도안의 슈퍼노트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 100달러 짜리 슈퍼노트가 다량 유통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목할 점은 북한의 슈퍼노트 제작에 실세그룹이 관여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임. 외교가에서는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등이 위폐제작 및 유통에 관여하면서 비자금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와 인민군 정찰총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 위폐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도 있음. 북한의 위폐 의혹은 공교롭게도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음.
- 당시 BDA 사태는 미 재무부의 위폐단속을 단초로 시작돼 결국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북한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겨줬음. 이에 따라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슈퍼노트 의혹이 제2의 BDA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옴. 북한의 또 다른 불법행위 유형은 가짜담배와 마약거래임. 가짜 담배의 경우 북한내 10여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개 가짜담배를 생산, 공해상에서 원양 밀수선에 선적한 뒤 소형 고속정에 나눠 동아시아의 거래책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마약의 경우 북한은 소규모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이 외화벌이와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국내 검찰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음.
- 특히 북한 접경지역 가운데에서는 지린(吉林)성이 최대 마약 밀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음.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은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회령 등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정보소식통들의 전언임.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국제 불법금융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음.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 사기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하는 등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설이 나옴.

#### 다. 중·북 관계

##### ● “北 후계구도 압축진행..중국이 세습인정”(8/6)

-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 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세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6일 제기됐음. 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간하는 ‘통일시대’ 8월호 기고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는 김 위원장 자신은 물론 주변 권력 엘리트들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안위에 대한 불안감은 후계작업 일정을 ‘압축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음.
- 전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지에 대해 북한은 체제유지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뒤 이를 7월 초순 각 학교에 시달했음. 조선총련은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를 찬양하는 교육 위주로 편성된 ‘현재 조선역사’ 등 역사수업을 문부과학성 전문관의 시찰 때는 하지 말도록 지시했음. 또 교장과 교직원실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저작집과 초상화를 철거해 별도의 ‘연구실’에 모은뒤 시정장치로 봉인하도록 했음.

- 이 연구실은 ‘혁명역사 연구실’로 불리는 사상교육의 중심 시설로 통상 학생들에게 개방됐으나 문부성의 시찰 때는 눈에 띄지 않도록 봉쇄했음. 산케이신문은 조선총련의 이런 조치는 문부과학성 전문관이 조선학교의 수업 모습과 시설 등을 비디오로 촬영해 고교무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제3자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삼는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전문가위원회에서 (조선학교의) 수업시간과 교과서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거친뒤 이달 중 무상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음.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은 “조선학교의 역사교과서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날조’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수업료 무상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음.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행정부 재량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반전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됨.

### ● “조총련계 고교도 무상교육” <日 방송>(8/3)

- 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음.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음.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음.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부터 지급됨.



## 마. 기 타

### ● <‘北-이란 핵협력 커넥션’ 의혹 다시 주목>(8/6)

- 미국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른바 ‘북한-이란 핵협력’ 커넥션 의혹이 새삼 주목받고 있음. 핵심적인 사안은 이란에서 북한으로의 우라늄 농축 기술 이전 여부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돼 왔음.
- 미국 몬테레이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의 레너드 스펙터 부소장은 지난 3월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엘로케이크’ 45t을 시리아와 터키를 통해 우회전달한 것은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음. 엘로케이크는 우라늄 원광석에서 분리된 중간생산물로, 노란 분말 형태의 일종의 정제된 우라늄임.
-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료를 이란에 제공하고, 이란이 이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던 것임. 스펙터 부소장은 “45t의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농축될 경우 수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면서 “북한과 이란간의 핵협력은 국제적 비확산 노력을 증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음.
- 그는 “북한이 이란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의 프로그램(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성공을 지원하는 호의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전망했음. 미사일 개발 관련 협력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서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북한’ 변수를 지적했음. 보고서는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며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성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음.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전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월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이란에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용각산총무역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결국 북한과 이란이 서로 우위에 있는 미사일 개발 기술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서로 주고 받았다는 게 양측간 핵 커넥션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이란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 5월25일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란은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앞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같은해 4월에도 북한과 이란이 긴밀히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에 하산 카시카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나서 북한과의 협력설을 강하게 부인했음. 그러나 이란 정



부의 계속되는 부인에도 북한-이란 간 핵 및 미사일 협력 의혹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서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력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콩당국, 북한과의 모든 사업·거래 조사”<RFA>(8/6)

- 홍콩 당국은 북한과 별이는 모든 사업과 거래를 유엔 제재에 근거한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다. 이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홍콩 금융관리국(HKMA) 대변인’의 언급을 인용, “북한과 하는 모든 사업과 무역 거래는 유엔 대북제재의 규정에서 다루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 방송은 또 “(이 대변인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의 거래를 포함해 북한과 이뤄지는 모든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약칭 대풍그룹)은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이며,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1월 “투자 유치 등을 수행할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본부를 평양에 둔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대변인은 이어 HKMA가 대풍그룹 계열 4개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정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HKMA는 지난달 말 ▲대풍국제투자그룹 홍콩유한공사 ▲대풍국제투자홀딩스 버진아일랜드유한공사 ▲대풍국제투자그룹 ▲타이핑(Taifung, ‘대풍’의 중국식 발음) 국제투자그룹 4곳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홍콩 내 199개 은행에 요청했음.
- 앞서 홍콩 상업경제국(CED)은 지난달 23일 “홍콩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왔고, 올해 1월부터는 새롭고 강화된 대북제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심화시켜 집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찾아낸 위법 사안들에 대해 홍콩 사법당국이 곧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 “北-이란 우라늄농축 협력 의심”(8/6)

- 정부 고위소식통은 6일 대이란 제재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했다면 반대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북한에 수출했을 개연성이 있고 충분히 의심이 간다”며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은 오래전부터 이뤄져왔으며 대이란 제재문제는 단순히 이란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와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



사일과 이란의 샤하브-5이 만들어졌다”며 “양측은 지난 1980년대부터 미사일을 놓고 기술제휴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우리나라 농축기술에 대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기술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음.

- 그는 한국의 구체적인 제재 참여여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이란 제재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 “北, 수해 관련 외부지원 요청 안해” <VOA>(8/5)

-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기반시설 파괴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 유엔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의 제프리 킬리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은 4일 “최근 유니세프 관계자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일부 기반시설이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유엔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의견도 참조했다”고 말했다.
- 킬리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현재 홍수 대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VOA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유니세프가 북한에 전달할 긴급 구호물품 10만명 분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 ● FAO, 자금난으로 ‘對北식량안보사업’ 취소(8/4)

- 국제사회의 지원금 급감으로 자금난에 처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대북 ‘식량안보사업’을 취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 FAO의 티어도어 프리드리히 곡물 생산체계강화 담당관은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술협력사업’(TCP)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 북한에 대한 ‘식량안보’사업이 취소됐다”고 이 방송에 밝혔다.
- 그는 이어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도 기금을 모으는 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자금 규모가 줄어들자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FA는 “2003년부터 프리드리히 담당관은 매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이모작농법을 전수하고, 홍수나 냉해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보존농법’을 전파해왔다”면서 “이번 식량안보사업 취소로 ‘보존농법’의 확대 실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보존농법’은 비료 대신 작물의 그루터기를 분해시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수분을 보존하고 미생물층 파괴를 막는 친환경 농



법임. 프리드리히 담당관은 “척박하고 딱딱한 땅은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지만 비옥한 토양은 빗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북한 전역에) 보존농법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 “조지워싱턴호 서해도 파견..훈련계획”(8/6)

- 미국은 동해상에서 지난주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연합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어 서해상에서도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5일 전해졌음. 특히 서해에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은 동해 훈련에 참가했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다시 참가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밝힌대로 (한미) 양국군간의 다른 해·공군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들 훈련은 동해와 서해 모두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렐 대변인은 “조지워싱턴호가 다시 한번 참여할 것”이라면서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할 훈련의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향후 수개월 동안 이들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잠수함 훈련도 서해에서 열리느냐는 질문에 “대잠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격과 특수전 훈련 등 여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훈련은 무력시위(show-of-force)의 훈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조지워싱턴호를 동해 훈련에 이어 다시 서해훈련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공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이자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됨. 모렐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연일 반발하며 보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 훈련은 여러차례 언급한대로 본질적으로 방어적 연습”이라고 일축했음.
- 그는 “이런 연습들에 그들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들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경고했음. 그는 이들 훈련이 한미 양국군의 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한미 양국군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들을 억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첫번째로 열린 ‘불굴의 의지’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는 이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렐 대변인은 이날 동해를 동해와 일본해로 같이 언급했음.



### ● 정부, ‘對이란 독자제재’ 본격 추진(8/5)

- 정부가 미국 의회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 제정과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정부는 그러나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이란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재수위를 둘러싼 정부의 검토 방향이 주목됨.
-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현재 제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독자제재는 국내외적인 이란 관련 제재들을 하나로 묶어낸 ‘제재 종합세트’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이 같은 국제적 조치의 범주 밖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우리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김 대변인은 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오는 10월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나오면 미국 등 관련국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김 대변인은 “국내적으로는 관련부처들간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미국의 이란 제재법과 관련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제재방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관련 단체와 기업의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하되, 원유공급과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제재방안의 형식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국내법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된 이란 제재조치들이 하나로 집대성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음. 외교가에서는 지난 3일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40개 조직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일반적인 수출행위는 일정기준 하에 허용토록 한 일본 정부와 비슷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독자제재의 기본방향과 밑그림을 정리하고 세부적 이행계획은 오는 10월 미국의 세부 시행규칙이 나올 경우 이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란 멜라트 은행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름에 따라 원유공급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해 대체 결제루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한편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이란 핵문제, 한국에 가장 큰 과제될 것”(8/5)

-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장차 이란 핵문제가 한국에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음.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앨런 레프코위츠 교수는 4일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한국과 중동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이란 핵위기가 악화되거나 강한 대(對)이란 제재가 이뤄질 경우 한국은 이란과의 무역과 투자에 미칠 결과를 고려해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이란의 핵위기 고조를 자신들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올리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프코위츠 교수는 이란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경제적 고려들이 여전히 한국 외교를 좌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말했다.
- 그는 그동안 이란과 미국간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계속 이란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왔으면서 “한국과 이란간의 교역 규모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이란 핵문제 초기 ‘균형잡힌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냈으면서 “한국의 정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내려진 이란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는 따르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이 취했던 것과 같은 자발적인 강한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발적인 이란에 대한 제재들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치적 결정을 요구한다면서 한국은 그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앞으로 한국의 이란 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한국이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방정식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유외교 “美 대북추가제재 2주내 발표”(8/4)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구체적인 조치가 곧,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반응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방위를 위한 훈련은 규모는 작지만 과거에도 해왔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용서치 않겠다는 한미 양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에게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확고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아울러 유 장관은 최근 국정원 직원 추방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한-리비아 간의 외교갈등에 대해 “이상득 특사 방문을 계기로 진정 국면으로 간다는 데 양측간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에 따라 정보기관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외교적으로, 정보기관 간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음.
- 또 리비아측이 우리 정부에 돈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금시초문”이라 밝히고, “이러한 내용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양국간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 ● 한미 대북 금융제재 공조 논의(8/3)

-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3일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두 나라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음.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과천 기획재정부를 찾아 김익주 국제금융국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 공유 강화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면담에는 미국측에서 대니얼 그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 10여명이 배석했으며 재정부에서는 이후명 외환제도과장 등 국제금융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에서 한국측과 좋은 대화를 나누겠다”며 짧막하게 답변했음. 이날 면담은 미국측에서 대북 금융 제재 및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구상을 한국 재정·금융 당국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시간여 정도 이뤄졌음.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국측이 대북제재로 구상하고 있는 북한의 자금 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차단 등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면담이 끝난 뒤 “대북 금융 제재 및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측이 내용을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협조해달라는 자리였다”면서 “미국측이 주로 이란제재법안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음.
- 재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주요국가들이 동참해 금융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위조지폐나 자금 세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도 지난주 세미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미 재무부 관리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음. 신 차관보는 “워싱턴을 방문하면 당연히 미 재무부를 들러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라며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면 된다” 말했다.

### ● <정부, 美 포괄적 이란제재에 대책 부심>(8/3)

-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미국이 지난달 우리 정부 및 진출기업 대부분이 거래하는 이란의 멜라트 은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제정함에 따라 당장 공관 임직원의 월급 지급은 물론 수주 및 수출 대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임.
- 실제 외환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은 미국 의회의 이란제재법 제정 직후 이란계 금융회사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 업무 일체를 중단하기도 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미국이 이란 제재법 제정 이후 90일 이내에 제정·공표할 시행세칙의 내용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체 송금루트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3일 “추후 공표될 시행세칙의 내용을 보고 일일이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제재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멜라트은행과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라면서 “정부 나름대로 새 송금루트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을 통해 이란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전날 아인혼 조정관과 면담을 마친 뒤 연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은 제재의 대상이 아닌 원유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한국과 이란 간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지만 용역 제공을 금지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란 제재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아인혼 조정관도 김익주 국제금융국장과 만나 주로 미국의 이란제재법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임. 다른 소식통은 “미국의 새로운 이란 제재법으로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끊을 것인지, 이란과 거래를 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손익계산을 따져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 “한·미 원자력협정-파이로프로세싱 분리 합의”(8/3)

-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이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도입 문제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각국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이르면 오는 다음달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 소식통은 3일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어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자문관을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파이로 프로세싱과 구분, ‘투트랙’으로 하자고 제의했고 아인혼 조정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협상은 이르면 9월쯤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파이로 프로세싱의 타당성 검토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시작한 뒤 추후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반영한다는 방침임.
- 한·미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착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파이로 프로세싱과 개정 협상을 분리했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조정관도 아인혼 조정관에게 ‘파이로 프로세싱이 우리 과학계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미국 관련 기관을 통해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 ● 한·미, 대북제재 방안 집중 협의(8/2)

-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한국 정부 고위인사들과 잇따라 회동,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함.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한데 이어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준 차관보를 차례로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갖고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오후에는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오찬을 겸한 업무협의를 가진 뒤 조현 다자외교조정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면담함.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이날 오후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재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혼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팀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음.



## 나. 한·중 관계

### ● “中 서해훈련 반대는 독점적 해상통제권 요구”(8/6)

- 중국이 서해 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 것은 서해에 대한 독점적 해상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6일 오후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리는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 토론문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근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해상패권 추구하고 관련이 있고, 중국은 지금 서해에 대한 독점적 해상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음.
- 김 전 사령관은 “이는 (중국이)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서해 우리 해역의 대부분이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음. 그는 “중국 해군은 현재 연안으로부터 900km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께 연안으로부터 2천km까지를 영향권에 두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과 함께 현 4만1천여명 수준의 해군 병력을 7만~8만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하고, 포항 제1해병상륙사단 일부를 서해5도로 증원하는 한편 추가 증원을 위해 평택에 제2해병상륙사단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전투력 극대화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과거에 효율성이 입증된 3군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육·해·공군 합동성을 강조하는 추세와 배치되는 대목임.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서해 접적 해역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이 대부분 북한 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제2, 제3의 피격사건도 시간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음.
-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 원고에서 “중국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중국은 서해 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해화하려는 패권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 中, 한반도 평화 안정 노력 촉구(8/5)

- 한국군의 서해 합동훈련 계획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 의사를 밝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계국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 4일 보도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뉴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은 5일부터 닷새간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북한군은 한국



군의 훈련을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음.

#### ● 中해방군, 한달여간 8차례 군사훈련(8/4)

-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 한 달여 만에 8번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태세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4일 지난(濟南)군구가 산둥(山東)성과 허난(河南)성에서 실시 중인 대규모 방공훈련은 적군의 국토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군사평론가의 말을 인용, 이는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유례없이 높인 것이라는 자평했음.
- 인민해방군이 한 달여 간에 벌인 8차례에 걸친 군사훈련 중에는 정례적인 것도 있으나 예년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일부는 사상 첫 훈련이어서 미국의 주도한 한미해상훈련과 남중국해를 놓고 벌어진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군사적 대응태세 점검의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인민해방군은 한미연합훈련이 서해에서 실시될 것이란 설이 나돌던 지난 6월30일 동중국해에서 수십척의 함정과 전투기들을 동원, 미사일 실탄 발사훈련을 한 후 이를 언론에 즉각 공개해 한미서해훈련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음.
- 인민해방군은 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던 기간 서해에 인접한 지난군구과 난징(南京)군구가 장거리 로켓 포 발사훈련 등을 벌였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상에선 이례적으로 동해함대, 북해함대, 남해함대 등 3대 함대가 총출동, 대규모 실탄발사 훈련을 했음.
- 다음은 인민해방군이 최근 한달간 실시한 군사훈련 일지.
  - ▲ 8월3일 = 산둥·허난서 대규모 방공훈련인 전위(前衛)-2010 훈련 돌입. 1만2천여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해·공군과 육군항공대 소속 7종의 항공기를 동원.
  - ▲ 8월 초 = 공군, 처음으로 열차편으로 티베트로 중요 전략물자 수송훈련.
  - ▲ 7월30일 = 베이징군구 기계화 보병, 산서(山西)서 네이멍구(內蒙古)로 전술 이동훈련. 처음으로 50t 규모의 장비 고속도로로 수송.
  - ▲ 7월27일 = 지난군구, 산둥성내 서해에 인접한 도시에서 전투부대와 각종 무기들을 동원한 가운데 군사훈련 실시. 항공실병력·실장비 원거리 수송 훈련이 이뤄졌고 로켓, 위성통신 장비 등 동원.
  - ▲ 7월26일 = 북해·동해, 남해함대 등 3대 함대가 합동으로 미국의 공개적인 개입의지 표명을 계기로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에서 주력 구축함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대규모 실탄 사격훈련 실시.



- ▲ 7월25일 = 난징군구 포병부대가 신형 장거리 다연장 로켓인 PHL03 첫 발사 훈련. PHL03는 사정이 150km 달하며, 지난해 10월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식 때 선보인 바 있는 중국의 최신예 로켓. 서해 부근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하는 훈련 모습을 27일 관영(CC)TV 통해 방영.
- ▲ 7월18일 = 국가교통전쟁준비판공실과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군사교통운송부는 17-18일 양일간 산둥성 옌타이(煙臺) 부근 서해상에서 지난군구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병력 구조와 무기 수송을 위한 훈련 실시.
- ▲ 6월30일 =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훈련 돌입. 수십 척의 함정과 전투기 10여 대가 편제를 이뤄 동시 사격훈련을 하고 군함과 고속정에서 미사일과 유도탄을 발사하는 훈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

#### ● 中인민일보 “韓천안함조사 의문” 기고문(8/4)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조사 결과에 의문을 던지면서 한미가 천안함 사건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고문을 게재했음. 인민일보는 4일자 3면 국제논단에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산하 세계정치연구소의 천상양(陳向陽) 부연구원이 쓴 ‘냉정과 자제가 더 요구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음. 천 연구원은 한반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물임. 인민일보가 그동안 국제문제 전문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와는 달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사실 또는 기고문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천 실장의 글 게재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 천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우선 한국매체를 인용해 “한미가 동해에서 나흘간 합동군사훈련을 한데 이어 이번달 16~26일까지 다시 합동훈련을 하고 연말까지 매달 훈련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훈련의 목적이 조선(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고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5월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지만 의혹이 적지 않았고 6월말에는 조사단 스스로 조사결과 발표 당시 소개했던 북한 어뢰의 도면에 잘못이 있었다고 자인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음. 그는 그러면서 “한국 여론은 천안함 사건이 일종의 뤼성문(羅生門) 사건이 된다



면 한국 정부에도 큰 충격이겠지만 국가명예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기술했음.

- 뒤생문은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천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가 민군합동조사단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각국 방문외교를 펼쳤으나 러시아 측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 주장은 천안함 사건의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표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에 대한 공격행위는 규탄했지만 그것이 북한의 행위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음.
- 그는 이어 지난달 20일 한미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고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 등을 겨냥한 대북 추가제재 결정을 내렸으며, 한미의 이런 일련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한 불만표시일뿐더러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아울러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천안함 사건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6.2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과장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음. 천 연구원은 이와함께 지난달 3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제2의 조선(한국) 전쟁의 전주곡으로 한반도 상황을 폭발적인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한국 내에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양국간 동맹을 강화시켜주겠지만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소개했음.

#### ● “中군부, 韓美훈련 대응수위 강경으로 몰아”(8/6)

- 중국 군부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기조를 강경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군부가 지난 두달 간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를 강화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강경한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고 보도했음.
-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추진된 한미연합훈련과 이에 대한 중국측의 대응과정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SCMP에 “중국 외교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여러차례 입장을 바꿨다”면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강경쪽으로 흘렀는데, 이는 의사결정 도중의 정치적 협상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음. 이 소식통은 “민간인 출신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민해방군(PLA)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아 굴복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외교정책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주재하고 다수의 인민해방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영도소조(外事工作領導小組)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시로 바뀐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는 중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적 이해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공산당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된 당 내부 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SCMP는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및 성명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최소한 4차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음. 친 대변인은 6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친 대변인의 6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는 ‘한미 양국이 서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그 같은 보도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태의 진전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높였음. 이어 친 대변인은 7월 6일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발언의 강도를 더욱 높였으며, 7월 8일에는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렸음.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양국 군함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불굴의 의지’라고 명명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다. 한·일 관계

##### ● “日여당, 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신중론”(8/4)

-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총리 담화에 대해 민주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돼 정부가 어려운 판단에 몰리고 있다고 NHK방송이 4일 보도했음.
- 이 방송은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의 식민지배에 관한 견해를 새로운 총리 담화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총리 담화의 내용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해결된 전후 배상의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음.



- 민주당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마쓰바라 진(松原仁.54)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에게 “(총리, 관방장관의) 여러 가지 담화 탓에 일본 외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총리 담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여당 안에서 논의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고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리 담화를 발표할지 여부를 포함해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NHK방송은 “하지만 한국내에서 일본 총리의 담화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현단계에서 담화를 내놓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담화를 발표할지는 물론 담화를 내놓을 경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간 내각이 어려운 판단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강제합병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명의의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9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의 8월의 의미를 잘 안다”고 말해 총리 담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 ● 반 총장 “북일관계 개선 중요”(8/3)

-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반기문 총장이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실현하려면 북한과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며 “일본측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음.
- 반 총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 투하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핵 없는 세계의 구축을 전 세계에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총회 회기 중인 내달 24일 뉴욕에서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일정도 공개했음. 오카다 외상은 “(반 총장의 히로시마 방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높게 평가했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뜻을 비쳤음.
- 이 밖에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올해 5월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채택한 최종 문서의 행동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유엔과 일본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반 총장은 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음. 4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을 만나고, 5일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투하지인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데 이어, 6일 히로시마 위령제에도 참석할 예정임.



## 라. 미·중 관계

### ● 中 리커창 “이란과 협력 지속”(8/8)

- 미국이 전 세계에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고위 지도자가 이란과 경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음. 중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6일 방중한 마수드 미르카제미 이란 석유장관과 회견에서 “이란은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중요 통상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공급국”이라며 “상호 경제·통상 협력은 많은 성과를 낳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음.
- 리 부총리는 “중국은 앞으로도 이란과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평화유지, 안정, 번영을 위한 주요 국제 이슈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핵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에너지 당국과의 협의차 베이징을 방문한 미르카제미 장관은 “중국과 이란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지난 4일 “중국과 이란 사이의 경제 관계는 정상적 거래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해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완곡하게 밝힌 바 있음. 세계 2위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올해 상반기 이란에서 900만톤의 석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임.

### ● 中, 美항모 서해파견 계획에 반대(8/7)

- 중국은 6일 미국이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파견할 계획이라는 미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반대의를 분명히 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답변에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유관부문에 이미 수차례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유관부문은 우리의 우려섞인 관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 장위 대변인은 이날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동해훈련에 이어 서해훈련에도 참가할 것이란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 중국 외교부는 한미가 지난달 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군사훈련을 할 계획이란 발표가 나올 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반대의를 표시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



-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그러나 동해상에서 지난주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연합 ‘불굴의 의지’ 훈련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항모가 자국안보에 민감한 해역인 서해에서 훈련에 들어가면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 中, 美-베트남 핵협정 추진에 반발(8/6)

-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베트남이 핵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국제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중국 외교부는 6일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의 이중 잣대 정책을 비난하고 미-베트남 핵협력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군축감군협회 텅젠췌 연구주임은 이날짜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핵협정과 관련,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핵비확산을 추진해온 대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논평했음.
- 이는 미국이 종전에는 다른 국가에 농축우라늄의 현지 생산을 불허하는 정책을 취해오다 베트남에 대해 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임. 텅 주임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죄어온다고 해서 중국의 갈길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전략 사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공포에 떨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음.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판지서(樊吉社) 연구원은 “미국이 베트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미국은 핵비확산 의지에 비해 지정학적 전략적 고려가 우선한다고 쓰아 부쳤음.
- 국가안전정책연구위원회 리칭궁(李慶功) 부비서장은 중국은 미-베트남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경제태세를 갖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에 눈을 감고있을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 “中 동평-21, 美 태평양 장악력 위협”<AP>(8/6)

- 중국이 개발 중인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동평(東風)-21D’가 최강의 해·공군 전력에 기반한 미국의 태평양 장악력에 거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AP통신이 6일 분석했음.
-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중국이 앞으로 5년 안에 격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음. 미국의 최강 공군·해군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인 군사 장비가 있다면 항공모함임. 항공모함이 공해상으로 접근하고 함상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면 지구상의 분쟁 지역 어느 곳에도 출동 가능하기 때문임. AP통신은 중국이 개발 중인 항모킬러 미사일 동평-21이



미국이 이 분야에서 독점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조만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특히 태평양에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켜 한반도 및 대만 지역의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미국 주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의미임. 지상에서 발사되는 항모킬러 미사일인 동평-21은 해안 1천 500km 거리에 있는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1만8천km에 달하는 중국의 해안선 주위에 형성된 공해상으로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함. 동평-21은 재래식 무기라는 점에서 쓰임새가 더 큼. 핵무기로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핵무기 반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임.
- 중립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프로그램 담당 선임국장은 “동평-21로 대표되는 중국의 대함 미사일은 냉전 이후 미국의 해군력 투입을 막을 수 있는 첫번째 억지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미 해군대학의 요시하라 토시 교수는 “미국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만큼 가까이 다가서기 훨씬 전에 중국이 미국(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해양 통제력은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음. 미 해군대학의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는 최근 한 잡지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5년 후면 동평-21이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격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음. 크라스카 교수는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음.
- 중국의 해군·공군력이 미국과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전력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다만 동평-21과 같은 미사일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중국이 동평-21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림. 가장 빠르면 올해 연말, 늦게는 약 10년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음.

#### ● <中, 美의 北추가제재에 ‘앞가림’ 나선듯>(8/5)

- 중국이 미국의 대북추가제재방안 발표를 앞두고 ‘앞가림’에 나선 것으로 보임.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에서 경험한 대로 강도가 어떻든 간에 미국이 북한에 추가제재를 취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에 어떤 식으로든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이 때문에 중국은 우선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에 주목하면서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5일 “중국 당국은 크게 대북 추가제재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비한 앞가림을 하고나서, 북핵 6자회담



과 향후 북한 경제 및 후계구도에 어떻게 작용할 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가운데 중국은 대북 추가제재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어떨 지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추가제재 대상이 누가 될 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 지금까지 나온 미 행정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미국의 추가제재는 북한 권력층 유지의 기반이 되는 사치품 수입 또는 마약, 위조지폐, 가짜 담배 제조·거래 등의 불법 활동 연루 기관과 단체, 개인을 지정해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정하되 그와 관련된 제3국의 기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협조를 요구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미국 법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의 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모든 나라의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이란제재와는 달리 이번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의 철저한 이행을 자발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다름.
- 중국은 그러나 BDA식 금융제재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북한 리스트가 발표되면 미국내는 물론 여타 국가들의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북한 자금을 동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나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해야 했음.
- 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하순 미 행정부가 대북 추가제재 의지를 밝힌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북한과의 거래내역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음.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지난달 말에 홍콩내 199개 은행에 금융거래 조회요청서를 보내 근래 북한 외자유치 창구로 떠오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관련 4개사와의 지난 6년간 거래내역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설명임. 베이징의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북한 관련 조사는 대풍국제그룹만이 아닐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미국의 추가제재에 포함될 만한 북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가상 리스트를 만들어 전반적인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의 이런 내부 조사는 적어도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이달 말 이전에는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이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북 추가제재의 밑그림을 그린 아인혼 제재조정관이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들고 방중하면 그에 대응한 자체 카드를 만들어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임.
- 중국은 애초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미국이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북핵 6자회담 대화국면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



으로 알려졌음.

-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강행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화하면서 자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켜가자 6자회담 재개 시도는 일단 ‘보류’한 기색이 역력함.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후 북한과 중국 간에 오갔던 6자회담 재개의 목소리는 이미 잦아들었음. 중국은 미국의 이번 추가제재가 향후 한반도 구도에 어떻게 작용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일단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초 방중에서 밝힌 경제발전 계획을 전폭적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가 무리없이 안착돼 북한내에서 정치·사회불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임. 그러나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가 현실화하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줘 사회불안이 야기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전망이 이미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음. 일각에서는 그 같은 대북추가제재가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해줘 추가적인 ‘도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함. 대북 추가제재→북한 추가도발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중국은 그럼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이 아직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 <中, 美의 ‘봉쇄’ 돌파위한 제의 잇따라>(8/5)

- 중국과 미국간에 군사적 갈등이 동.서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미국의 ‘중국 봉쇄 움직임’에 썩기를 박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음.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인 장자오중(張召忠) 소장은 5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관련 당사국들이 외부의 개입없이 해결할 수있다고 하며 미국의 개입 의지에 썩기를 박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음.
- 군사전략가인 장자오중 소장은 중국과 관련당사국들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적 해결만이 이 문제를 풀 수있는 관건이라는 데 관련국가들의 공동 인식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음. 또 관영 CCTV의 군사평론가 쑹샤오전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은 미·중간의 갈등과 관련, 출타기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면 결국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음.
-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루디 랩턴 미 7함대사령관이 미국은 남중국해를 국제수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쿄에서 발행되는 외교전문잡지인 ‘외교관’은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봉쇄 의도에 맞서 한편으로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막강해지고 있는 경제력을 평화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악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폭과 양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미국의 침략 의사를 없애고 강경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도록 하라는 주문이라는 것임.
- 중국은 미국에 맞서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달리 미국과의 전쟁의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봉쇄에 항복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사설은 강조했다.

### ● 美 “中, 수출 의존 탈피하라”(8/3)

- 미국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수요의 원천”이 되길 바란다고 라엘 브레이드너 국제 담당 미 재무차관이 2일(이하 현지시각) 말했다. 브레이드너는 이날 블룸버그 TV 회견에서 “성장의 원천이 다시 균형잡게 만들고, 세계가 미국의 소비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중국이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그는 위안 환율에 대해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장 요소들에 따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바뀔지가 우리에게 대한 테스트”라고 말했다. 브레이드너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회동에 참석해서도 “위안이 시장 요소들에 따라 얼마나 빨리, 어떤 폭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시 그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위안 문제 대응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국이 그들의 경제 균형을 조정하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8일 낸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의회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월 19일 위안 환율 변동폭을 ‘유연화’한다고 밝혔음. 이후 달러에 대한 위안 가치는 0.8% 가량 상승했음.

### ● 中해군장성 “美 해상패권 의지 포기해야”(8/3)

-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2일 “해군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은 필연적으로 발전해 강대해질 수 밖에 없으며 대양(大洋)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이제 냉전적 사고와 해상 패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이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중국의 해군력 발전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도 공헌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섬들의 고리’로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양 소장이 언급한 ‘섬들의 고리’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잇는 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는 “중국은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없을 뿐더러 조화로운 세계건설, 평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제로 섬’이라는 사고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그러면서 “양측의 협력만이 (만약에 있을 지 모를 충돌로) 서로 패배하고 상처입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특히 비전통적인 안보위협분야의 경우 서로 협력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게 많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소장은 아울러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황해(서해)로 진입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려한다는 소식이 지난 6월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감정을 자극했고 이후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이 나왔으며, 그런 이후에 훈련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로 인한 감정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 아인혼 “中 책임있는 역할 원해”(8/3)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관련,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으로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는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 미·일 관계

##### ● 美 대사, 히로시마 피폭자 위령제 첫 참석(8/6)

- 6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廣島)시 나카쿠(中區)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투하국인 미국을 대표하는 존 루스 주일 대사 등 역대 최다인 74개국 대표와 피폭 희생자 등 약 5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제 및 평화기념식’이 열렸음.
- 미국 정부 대표가 히로시마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주일 미 대사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기념식에 참석한 루스 대사는 딱딱한





제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일동맹의 심화를 위해서는 후텐마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야 하지만 대한 결론이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공동선언의 발표 일정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의미임.

- 양국의 동맹심화 선언은 후텐마 이전에 대한 기존 미일 합의를 철회하면서 동맹 균열을 불렀다는 비판에 몰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작년 11월 열린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안했었음. 아사히신문은 미일 양국이 추진하던 11월 동맹심화 선언이 유보됨으로써 연내 발표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면서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지만 대일 외교정책이 순조롭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일 동맹심화 선언이 유보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일본을 방문할 필요성이 희박해져 방문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음.

#### ● 日, 이란 추가금융제재 결정(8/3)

- 일본 정부가 3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핵 관련 단체·기업의 자산동결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토대로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확정했음. 자산동결 대상은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을 비롯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40개 조직과 개인임. 일본 정부는 또 이란의 대형 일반무기 공급과 관련한 자금 이동도 차단하기로 했음.

#### 바. 기 타

##### ● 베트남 “中 남중국해 탐사활동은 주권 침해”(8/6)

- 베트남 정부는 5일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西沙) 군도에서 벌이고 있는 지진연구 활동과 영토 확장적인 활동은 베트남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비난했음. 응옌 푸옹 응아 베트남 정부 대변인은 중국이 5월 말부터 지진탐사선을 파견해 파라셀군도 트리톤 섬 일대에서 지진연구 활동을 벌이고, 팡응아이주(州) 라이손 섬에서 약 167~214km 떨어진 베트남 대륙붕에서도 석유·가스 탐사 활동을 수행 중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음.
- 또 트리톤 섬에서 건설공사를 위해 지면 평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 외무부가 베이징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응아 대변인은 지적했음. 응아 대변인은 “중국의 이런 행위는 파라셀 군도와 이 일대 대륙붕에 대한 베트남 주권,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침해이자 (양국이 분쟁 방지를 위해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문’의 정신에 반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석유와 가스가 풍부히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파라셀 군도는 과거 남 베트남에 속했으나 1974년 중국에 강제 점령되면서 양국간 영토분쟁 지역이 됐으며 중국은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을 나포해왔음. 특히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자 중국 측이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해 이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